

“제주형 BRT 고급화 사업 도민공론화로 추진 여부 결정”

오영훈 전 도정, 도심교통난 해소 위해 도입
“불편하다” 민원 쇄도… 현재 공사 잠정 중단
위성곤 지사 ‘재검토’ 입장… ‘신중론’도 제기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의 대표 정책이자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의 추진 여부가 도민공론화를 통해 결정될 전망이다.

14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5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김상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BRT 사업이 효과는 있었으나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 있다”며 “올해 하반기에 기존 사업 구간과 나머지 구간(동광로)에 대한 사업 추진 여부를 속의형 공론화 등을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형 BRT 사업은 도로 한가운데 마치 섬처럼 조성된 섬식정류장과 양방향으로 내릴 수 있는 양문형버스 도입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 전략으로, 대중교통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정시성과 편리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대중교통 수요 확대를 통한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BRT 사업은 당초 동광로~서광로~도령로~노형로까지 이어지는 노선으로 계획됐지만 지난해 5월 제주시 서광로 3.1km(광양로터리~도령마루) 구간 조성 이후 교통체증, 섬식정류소 이용 불편, 우회전 구간 사고 위험 등의 민원이 이어지며 현재는 사업이 잠정 중단된 상태다. 제주도는 제기된 민원에 대응해 버스베이 신설, 버스우선신호 도입 등 개선책을 내놓았으나 여론을 바꾸기에는 턱없이 모자랐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섬식정류장과 양문형버스는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는 등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으며 취임 후 인수위원회가 공개한 100대 정책과제에서도 ‘제주 BRT 전면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제주도는 교통 전문가 및 전문가와의 협력을 바탕으로 BRT 사업의 기술·운영적인 문제점을 정밀 분석해 단기 개선안과 사업 재검토를 전제로 한 장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김상용 교통항공국장은 “동광로 구간의 경우 설계는 마무리 단계이나,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며 “사업과 관련한 예산도 확보한 상태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상대적 정류장, 섬식정류장, 가로변 정류장 등 어떤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김덕홍 의원(무소속, 조천읍)은 “행정에서는 도로 상황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도민이 체감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며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대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동홍동)은 “실제 BRT 사업이 폐지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국토교통부도 시설 철거는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보조금 반환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비 반납 우려에 대해 김 국장은 “만약 극단적으로 (사업을) 폐지한다면 그런 부담은 있다”며 “국토부의 신뢰 문제도 있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오소범기자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핵심인 섬식정류장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서광로. 한라일보 DB

일 하는 취약계층 대상
도, 폭염 안전대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가 폭염에 노출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도내 취약계층 일자리 참여자에게 냉방비와 여름용품, 근무시간 단축 등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자활근로·노인일자리·장애인일자리 참여자 1만9231명을 대상으로 혹서기 안전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라 자활근로 참여자에게는 폭염 대비 냉방비와 여름용품이 지원된다.

또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는 탄력 근무와 안전 대책이 적용된다.

무더위가 절정에 이르는 낮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를 피해 근무시간을 조정하고, 육의 근무가 어려우면 실내활동으로 전환하거나 안전교육으로 대체한다. 더불어 폭염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근무요일을 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이해란 제주도 복지가족국장은 “현장에서 땀 흘리는 참여자들에게 이번 대책이 시원한 그늘막이 되길 바라며, 복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꽃자왈 보전 5개년 계획’ 수립 본격

도, 제주연구원에 용역
토지이용 현황 등 조사
“지속가능 보전방안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꽃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각종 개발 압력에 대응할 5년 단위 보전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2027년 6월까지 재단법인 제주연구원에 ‘꽃자왈 보전 기본계획(2027~2031)’ 수립 용역을 맡긴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5년간 적용될 꽃자왈 보전의 밑그림을 짜는 작업으로, 착수보고회는 지난 7일 열렸다.

꽃자왈은 한라산과 해안을 잇는

주요 생태축으로, 지하수 함양 등 지질적 가치를 지닌다. 그동안 꽃자왈은 보호지역 관리 기준을 두고 해석의 여지가 있었고 사유지 비중이 높아 각종 개발 압력에 노출돼 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기존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공간정보와 토지이용 현황을 종합 검토해 현실적인 관리 체계를 세우는 데 무게를 둔다.

주요 과업은 ▷꽃자왈 지역 현황 및 전망 분석 ▷보전 기본방향과 목표 설정 ▷주요 추진 과제와 보전 시책 ▷보호지역 내 토지주가 참여하는 소득 창출 방안 ▷재원 조달과 세부 실행계획 마련 등이다. 제주도는 착수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현황 조사와 기초자료 분석, 보전 방향·목표 설정, 보전관리·복원 방안 검토, 주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단계적으로 진행한다. 이를 통해 행정·예산·사업·제도 개선과 맞물리는 실행 중심의 계획을 완성할 방침이다.

임홍철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꽃자왈은 제주의 지하수와 생태계를 지탱하는 자산인 만큼, 보전 가치를 지키면서도 지역사회와 조화를 이루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며 “도민과 전문가, 행정이 함께 참여해 꽃자왈 보전정책의 방향을 구체화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관리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공공기관 성별 임금 격차 해소한다 도, 맞춤형 컨설팅 추진… 격차 원인 분석

제주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에서 성별 임금격차 원인을 분석해 맞춤형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컨설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내 공공기관 2곳을 대상으로 성별·직급별·직종별 임금자료를 분석하고 채용, 배치, 승진, 평가, 임금 결정·지급체계를 성평등 관점에서 점검해 기관별 특성에 맞는 개선 과제와 실행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컨설팅은 사전 준비, 현황 분석,

성별 임금격차 원인 진단, 개선 과제 도출, 기관별 실행계획 수립, 최종보고, 사후관리 순으로 진행된다. 기관별 자료 분석과 담당자 인터뷰, 제도 검토 등을 통해 조직 특성을 반영한 개선 로드맵을 제시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민선 9기 공약인 ‘여성이 당당한 제주, 함께 성장하는 제주’의 핵심 과제인 성별임금공시제 정착과 민간 확대를 위한 첫 실행사업이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성별 임금공시 의무화를 시작으로 민간으로도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직급별 성별 비율과 관리자 비율 등 공시 항목도 점진적으로 확대해 성평등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이은영 제주도 성평등여성정책관은 “성별 임금격차는 단순한 임금 차이가 아니라 채용, 승진, 보직, 경력관리 등 조직 운영 전반과 연결된 문제”라며 “공공기관부터 성평등한 인사·보수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민간까지 확산해 성차별 없는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존폐 기로… 3면 / 경찰, 휴가철 음주단속 12명 적발… 4면

제2회 한라일보배 전도 태권도 품새대회 성공개최를 기원합니다.

(주)삼대기획
Samda Event Rental

이사 고대환

제주시 신광로1길 10, 205호
Fax. 050)4245-7160
Mobile. 010-2603-2789
E-mail. samda2789@daum.net

몽골천막, 캐노피천막, 탁자, 행사용의자 임대
행사기획 및 이벤트 진행
무대, 음향기기 설치 및 임대
현수막, 상패, 행사용품, 책자, 홍보물 제작
이동식 화장실, 장애인용 이동식 화장실 렌탈